

정례브리핑

2021.2.22(월) 10:30, 이종주 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통일부 주요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부 장관 일정입니다.

장관은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합니다. 그간 외통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사된 안건들이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늘 오후 5시에는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에서 영상으로 축사를 합니다.

오늘 포럼은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유네스코 대한민국대표부가 주최하고, 통일부와 외교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열리게 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등 각국 전문가들이 '토착 언어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겨레말큰사전의 편찬 성과 등을 조망하게 됩니다. 이번 포럼은 겨레말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2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오후 2시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열리는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 세미나'

에 참석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적십자와 남북교류지원협회가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며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통일부가 지난해 서울대 통일의학센터와 함께 진행한 남북생명보건단지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어서 정부와 적십자, 국제기구, 의료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일방적·일회적 협력을 넘어선 호혜적·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방식으로 남북보건의료협력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는 토론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통일부 차관 일정입니다.

차관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참석을 하고, 이어서 2월 25일 목요일 오전에는 차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상 통일부 주요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장관이 3일 외신기자간담회 발언을 두고서 탈북민 일부가 오늘 명예훼손으로 장관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통일부 입장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월 3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탈북자들의 증언이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없습니다. 통일부와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들의 증언이 우리 정부와 국제 사회에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귀중한 기록이고, 이들에 대한 조사와 기록과정이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서 그동안 탈북민에 대한 인권조사, 기록 등을 충실하게 해왔고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기록들을 축적해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피해사실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과 관련한 제도나 정책 그리고 환경 등 제반 변화요인까지를 검증하고 확인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북한 인권 기록의 정확도·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올해 들어서 혹시 통일부에 대북반출 승인한 건수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도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혹시 통일부가 파악한 어떤 현황 같은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대북반출... 인도적 차원의 대북 물자반출 승인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인도적인 상황, 인도적인 필요성 그리고 코로나 상황과 북중 국경 동향 등 제반환경, 단체들의 입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장을 정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여전히 같은 기준

을 가지고 검토를 해 오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반출이 승인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북한의 코로나 백신 확보 동향과 관련해서는 북한도 국제사회가 함께 만든 코백스 퍼실리티라는 기구를 통해서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한 국제기구가 북한을 비롯한 대상국가들에 대한 백신 공급 계획 등도 이미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관련 동향 등은 정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외에 구체적인 북한의 백신 확보노력이나 동향 등에 관해서 이 자리에서 확인해 드릴만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해당 사업들이 이 대북체제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데 대한 통일부 입장과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이 재개를 모색할 예정이신지 통일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이 남북관계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여전히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18년 판문점선언 등 남북정상 간 합의 등을 통해서도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이러한 사업들을 재개해나갈 것다, 라는 입장을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이미 남북이 합의한 대로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이러한 사업들을 재개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이고요.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남북합의, 국제사회와의 협력, 공감대 확보 이런 노력 등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대북제재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는 대북제재의 틀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사업들이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질문> 그러면 일단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대북제재가 해결되지 않으면 통일부 입장에서는 먼저 나서기는 힘들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답변> 대북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건 저희의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각 사업별로 제재와 관련된 요소 등은 개별적으로 판단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강산 관광이라고 하더라도 관광이 진행되는 방식에 따라서는 현재의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제재의 영역이 아닌 방법을 통해서도 관광을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서도 현재 제재의 틀이 있고, 그 제재의 틀에 저축(※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적용' → '저축'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지 않는 방식 또는 이것을 유연화 하는 방안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야 할 사안입니다.

<질문> 오늘 조선일보 기사에 '고위직·전문직 탈북민 안보전략 채용에 0명'이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이번 정부의 입장이 따로 있을까요? 전 정권에서는 여럿 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답변> 정부는 모든 탈북민이 그러니까 국내에 입국하기를 희망하는, 국내에서 정착하고자 하는 모든 탈북민이 우리 국민으로서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모든 탈북민에 대해서 신변보호라든지 주거, 취업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고위급 탈북민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사례에 따라서는 보다 강화된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이분들의 재북 경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북한이탈주민법을 보게 되면 탈북민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성격에 맞게 정부 각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대부분의 탈북민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이 보호 등을 진행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기관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고위급 탈북민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런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오고 있고, 이런 기본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